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 해소방안 마련 워크숍

- 일 시 : 2014. 11. 18[화], 16:00
- 장 소 : 보령시 한화리조트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행 사 일 정

◇ 개 회

◇ 주제발표: 16:10 ~ 16:50(40분)

- 주제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선행연구조사 및 현황
· 발표자 : 최진하(충남도청)

- 주제 :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 발표자 : 김태경(경기개발연구원)

◇ 방청석 토론 : 17:00 ~ 18:00(60분)

- 청중, 발제자

◇ 마무리 및 폐회 : 18:00

주제발표 1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파해 선행연구조사 및 현황

최진하 정책특별보좌관 (충남도청)

1. 개 요

- 사 업 명 : 보령 갯배마을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 위 치 : 보령시 신흥동 산 253-1번지
- 소 속 : 공군방공포사령부(평택소재)/주요인력 : 96명
 - 1962. 8 : 미8군 사령부 사격장 설치
 - 1981. 7 : 한국육군으로 이관
 - 1991. 7 ~ : 공군 방공포사령부에서 운영
- 운영기간 : 150일/년(해수욕장 개장 7~8월, 동절기12~2월, 휴일75일 제외)
- 주사격종목 : 대공포(발칸, 오리콘), 연 1회 미사일 사격

2. 주요 진행경과

- 2008. 6 : 지역주민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문제 공식 제기
- 2010. 6 : 공군사격장 인근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보도
- 2011. 6 :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추가 요구
- 2012. 7 : 환경피해대책 추진 중앙 건의(국방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 2012. 8 : 국회방문 및 사격장 이전 등 건의
- 2012. 11 : 보령 공군사격장 민원지역 주민 설명회(환경부)
- 2013. 3 : 보령 공군사격장 관련 대책회의(충청남도)
- 2013. 6 : 사격장 주변 수산물 안정성 검사 시료채취(해양수산부)
- 2013. 12 :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관련 주민간담회(충청남도)
- 2014. 1~6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선행연구 분석(충청남도)
- 2014. 7 :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갈등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14. 8 : 충청남도, 보령시 관계관 회의 개최
- 2014. 9 : 보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포함 주장 제기

3. 향후 추진계획

-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항만물류과, 수산과, 환경관리과, 수질관리과)와 협의를 통하여 소관별 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지속 건의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 팀 구성 등을 통하여 보령(갯배마을)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민원 지원
- 보령시의회 특위구성, 조례제정 등 주민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 갈등현안

- 군부대의 입지는 안보 및 전략적 고려하에 국가 및 주무부처의 권한 아래 결정되며, 입지결정에 지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보령 공군사격장은 안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피해대책에 대한 대응없이 오랜 기간이 지났으며,
- 지역주민들은 정주여건 보장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등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중인 상황임

5. 갈등요인과 유형

1) 성격(특성)

- 보령시 갯배마을 인근 공군사격장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갈등임
- 비선호시설(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만

2) 쟁점

-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 보령 공군사격장은 미8군 사격장을 시작으로 1981. 7 한국육군으로 이관, 1991. 7월부터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사격장으로 운영중임
- 사격훈련은 모형비행기를 띄워 해상에서 타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탄두, 탄피,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해 해양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임



[그림] 보령 공군사격장 위치도

○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부대이전

- 지역주민들은 약 50년간 운영된 사격장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로인한 지역민들의 건강 역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임
- 또한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군사격장의 이전을 주장함

3) 이해관계자

○ 국방부

- 보령 공군사격장 이전 계획 없음
- 2009년부터 3년마다 공군사격장 주변 해양환경 영향조사
- 매년 軍 자체에서 탄두수거(사업비 2억)
 - ※ 폭발의 위험성 등으로 민간위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
- 원인 제공자인 국방부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에 소극적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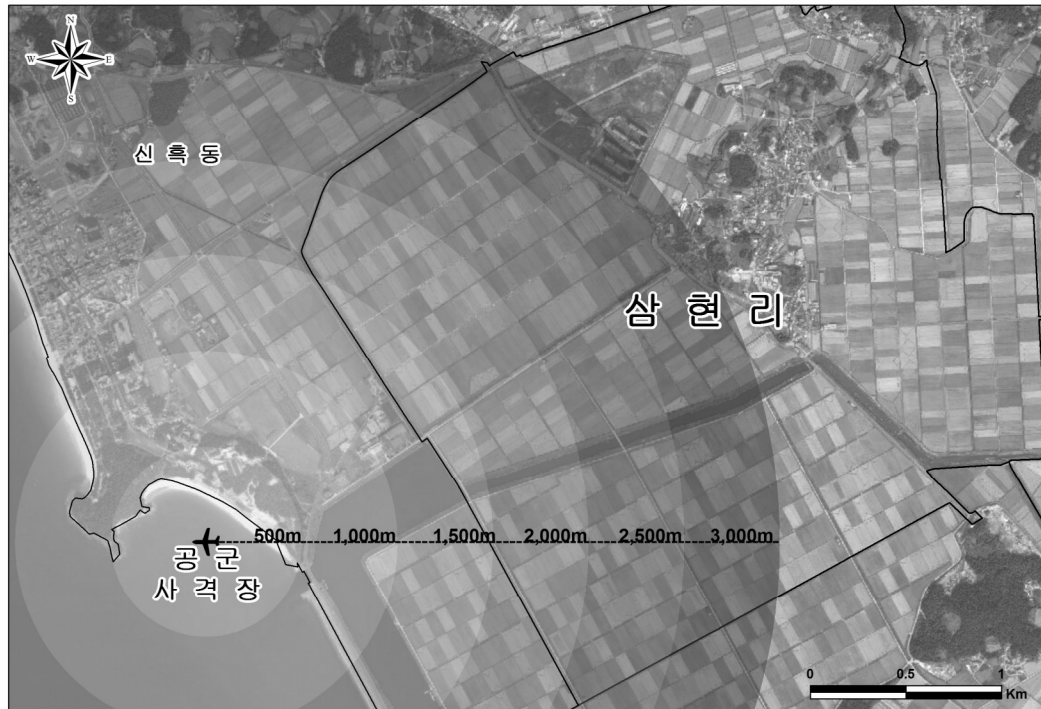
- 사격장 주변지역 암발생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암발생 현황검토 및 관계 전문가 자문 진행 中

○ 충청남도 · 보령시

- 공군 사격장은 국방부에서 운영중인 시설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는 관계없이 운영중이며,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부처에 피해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 지속 추진중

○ 지역주민

- 보령 공군사격장은 년 150일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이상등을 이유로 피해보상 및 공군부대 이전을 요구중임



[그림] 주민주장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지역 현황도

6. 갈등발생분석결과

○ 군사보호시설 특수성 고려

-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요구에 대해 군사임무의 저축점위 내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하고 있으며, 이전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임
- 군사시설은 안보를 목적으로 한 공공재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정상적인 의무를 벗어나 과잉의무를 지게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지역주민 의견

- 공군부대와 인접한 마을에는 40여 가구, 7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 공군부대의 사격장 운용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건강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음

○ 선행연구 분석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2012년까지 연구된 해당지역 조사보고서 6건을 분석함
- 분석결과 선행연구는 피해지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전노력(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전 협의)과 향후 심층연구과정에 대한 양자(피해자와 가해자)의 참여가 필요함

7. 정책적 제언

○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추진

- 1962년 이래 공군사격장 가동으로 인해 갯배마을 주변지역 토양 및 지하수, 해양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됨
- 이러한 군부대 주변지역 민원을 풀기 위해 민·관·군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해결 방향 논의 필요

○ 정밀조사 실시로 구체적인 인과관계 규명

- 연구보고서 모두 수질, 퇴적층, 수산물 등에 대한 오염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일부 중금속은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특히, 크롬, 납, 아연 등)하고 카드뮴은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분석 시료수의 제한과 측정 지역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인해 그 오염 원인이 공군사격장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후속 조사분석을 통해 오염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

○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정밀한 자료축적

- 대상지역 주민의 피해조사는 주민의 생체시료를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
- 생체시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시점(timing)이 매우 중요하고,

- 분석결과를 해석할 경우에도 노출시점을 고려하여 조사해야 함
- 토양오염과 식품오염 및 식이조사를 병행하여 생체시료의 분석결과를 해석해야 함
 -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국가에서 공인된 자료를 확보하여 세련된 통계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함

주제발표 2

마군 공여지역 특별법 자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김태경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충남 보령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정을 위한 세미나

2014. 11. 18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

현황

보령 암마을(갯배마을, 삼현리) → 70년대 미군주둔이 남긴 피해 (72명 중 27명)



미군부대에서 새어 나온 기름이 지하수 오염 → 식수로 쓰던 주민들 피해



미군부대 철수 후 한국군 사격장 사용
→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지원 없이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2006년 제정
- 본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경과〉

연도	추진내용
‘06.3.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08.3.28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1차 개정 -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전 조기 매각, 지원도시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09.2.2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정안전부, 20개 시·군 164 읍면동) - 국비지원 총 12,099억원(반환기지 토지매입 6,856, 주변지역 지원사업 5,243)
‘10.3.31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2차 개정 - 지자체의 도로·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확대 근거 마련(60~80% → 60% 이상)

2

반환공여지 지원사업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 현황

- 특별법에 의해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2개이며, 사업건수는 168건임
- 미군 주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유형은 공원부지 매입비 지원, 도로건설 지원, 도로부지 매입비 지원, 교량건설 지원 등임

< 사업유형별 비용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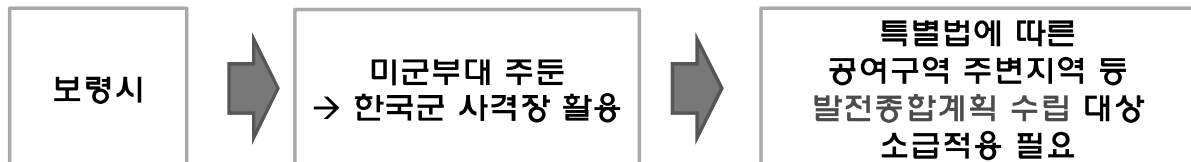
구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전국	89,372.1	21,145.3	26,404.8	41,822.0
공원조성	4,368.0	0.0	3,868.0	500.0
공원부지 매입	17,612.0	11,892.0	5,720.0	0.0
교량건설	260.0	130.0	130.0	0.0
교육연구단지	19,000.0	0.0	0.0	19,000.0
도로건설	18,977.1	7,685.3	11,291.8	0.0
도로부지매입	1,977.0	1,438.0	539.0	0.0
도시개발	19,012.0	0.0	1,232.0	17,780.0
리조트개발	3,552.0	0.0	0.0	3,552.0
산업단지	500.0	0.0	0.0	500.0
청사건립	4,114.0	0.0	3,624.0	490.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3

-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 의정부, 파주의 과거 지역경제 피해액은 36조 8,941억원에 달함

- 각 지역에서 미군이 주둔하던 시점부터 2011년까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기회상실' 비용을 보고 미군기지 주둔 토지에서 미발현된 경제적 가치를 피해액으로 가정하고 산정
- 일부 미군기지가 2005~2007년에 반환되었으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현재 미개발 상태 및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2011년까지의 피해 산정



4



최종보고회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

2011. 12. 23

PYEONGTAEK

I. 과업의 개요	2
II.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4
III. 평택지역개발계획 개선방안	10
IV.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V. 해외 미군주둔지 지원사례	25
VI. Vision 및 목표	33
VII. 발전구상	38

I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진행

- 2016년 용산기지 평택재배치
- 2004.12.31.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 실과별 87개 지역개발계획 연차별 진행

개발환경 및 정책의 변화

- ‘슈퍼경기만권’ 광역적 개발 가시화
- KTX, GTX 등 광역간선망 확충
- 5+2 광역경제권 대두
- 환황해권 국제화, 동북아 항만비즈니스

미래 평택시
발전방향 제시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수정 필요

- 사업 평가 → 부진 / 미추진 사업 수정
- 87개사업 예산집행, 추진현황, 성과 분석

8

Ⅱ 지역개발계획 추진현황

1. 예산투자 계획
2. 예산투자 현황
3. 사업진행 현황

9

1. 예산투자 계획

1) 평택지역개발계획 분야



10

1. 예산투자 계획

2) 세부 예산 투자계획

투자계획 총괄	188,016 억원	국비	지방비	공공	민자
		44,000 억원	7,104 억원	101,017 억원	35,895 억원

[부처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평택시
전체예산	188,016	4,335	11,637	498	6,408	2,167	547	12	1,723	40,909	254	71,820	47,706
국비	44,000	4,128	11,205	349	780	1,453	206	12	875	24,840	152	-	-
지방비	7,104	20	-	149	202	620	327	-	764	1,325	100	500	3,097
공공	101,017	187	-	-	-	-	-	-	-	-	-	56,743	44,087
민자	35,895	-	432	-	5,426	94	14	-	84	14,744	2	14,577	522
사업수	87	9	2	3	2	8	8	1	6	7	2	6	32

[분야별 투자계획]

도시정비	10조9,714 억	교육인력	656 억	농업	2,204 억	상업유통	1,561 억
교통물류	4조7,044 억	환경경관	2,213 억	제조업	1조6,765억	관광여가	7.058 억
						사회개발	802 억

11

2. 예산 투자현황

1) 세부 예산 투자현황

부 처 별				분 야 별				전 체			
구 분	예 산 액	투 자 액	비 율	구 분	예 산 액	투 자 액	비 율	구 분	예 산 액	투 자 액	비 율
전 체	188,016	73,370	39%	전 체	188,016	73,370	39%	전 체	188,016	73,370	39%
행안부	4,335	2,274	52%	도시정비	109,714	39,243	36%	국 비	44,000	14,903	34%
국방부	11,637	5,827	50%	교통물류	47,043	17,039	36%	지 방 비	7,104	2,283	32%
국토부	40,909	16,414	40%	교육인력	655	284	43%	공 공	101,017	39,637	39%
교과부	498	258	52%	환경경관	2,214	1,271	57%	민 자	35,895	16,547	46%
문체부	6,408	298	5%	농 업	2,204	1,236	56%	- 2006 ~ 2011.11월 현재까지 예산확보 현황 - 단위 : 억 원			
농림부	2,167	1,201	55%	제조업	16,765	11,992	72%				
보건부	559	362	66%	상업유통	1,561	1,039	67%				
환경부	1,723	631	37%	관광여가	7,058	827	12%				
중기청	254	256	101%	사회개발	802	439	55%				
경기도	71,820	32,680	46%								
평택시	47,706	13,169	27%								

총 계획 대비 투자비율 39%

12

3. 사업 진행 현황

1) 예산 집행 현황

[사업주관 기관별 추진사업 기집행율¹⁾ 현황]

기집행율	교육과학 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 가족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합계	
												사업수	비중
사업미진행	1		2	2		3	1		1	5	5	20	23%
50%이하	2	1	4	2	1	3		3	2	1	10	29	33%
50%초과~80%이하	1		1			2		2			5	11	13%
80%초과~100%미만					1		1	2	3		1	8	9%
100%이상		1		4		1		2			11	19	22%
합계	사업수	4	2	7	8	2	9	9	6	6	32	87	100%
	비중	5%	2%	8%	9%	2%	10%	2%	10%	7%	37%		

주1) 총사업비 대비 기집행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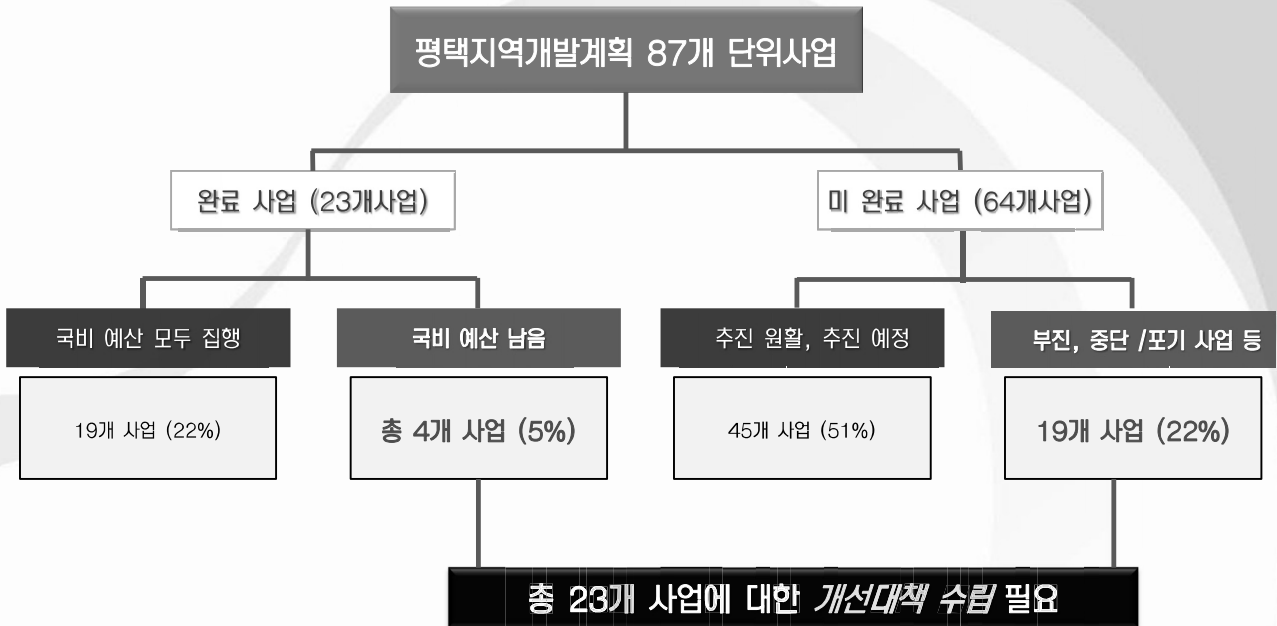
예산 집행을 50% 미만 사업
49개 (전체 56%) 로 저조

부진 / 미추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13

3. 사업 진행 현황

2) 사업별 현황



14

Ⅲ 평택지역개발계획 개선방안

1. 지역개발계획 정비방향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계획 변경 시 활용가능 자원 추정

15

부진·중단사업

지역개발계획에서 제외하고 역점사업에 집중

기존 사업 중 평택시 발전방향과 거리가 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사업정리 및 타 사업 전환 (선택과 집중 필요)

미추진사업 및 사업집행 후 잔여금액

중앙부처별 당초 사업비 구성과 관계없이 큰 틀에서 조정 및 변경

운영비가 수반되는 시설 조성사업(국제교류센터 등)

시설투자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포함

16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① 계획 수정/보완 필요

특별 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수수료를 징수하여 이자 및 원금상환 곤란 임대산단은 시 재정부담이 커 일반산업단으로 계획수정 필요(브레인시티 연계)
	•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미래농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재부 심의 탈락 →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 지원 곤란 사업타당성 재심의 및 중앙부처의 지원 촉구 필요 사업규모가 축소될 때에는 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등 검토
일반 지원	• 농·축산물 명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의 존폐여부에 따라 매년 사업개요 변경 핵심적인 사업으로 단순화 필요 (국비 18억)
	• 종합장사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 매입비용 등 재정부담으로 민자사업추진 곤란 재정부담 사업으로 변경 필요(경기 남부 지자체와 공동 추진)

② 타 사업으로 변경 필요

일반 지원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교과부소관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으로 미추진 국비 미확보 금액(1억) → 통합변경하여 타사업 변경 추진 필요
	•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년 7월 장기요양법 시행 이후 개인, 민간법인 건립 가능 국비 미확보액 50억 은 노인복지센터 확충(150억)에 투입필요

17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일반 지원	• 재래시장 고유상품 발굴 및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도심재정비 활성화 발전계획과 중복으로 미추진 • 국비지원사업의 폐지로 국비확보 곤란, 타사업 변경 필요 • 국비 1억 (통합변경 필요)
	• 농촌테마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지원대상 사업의 폐지로 국비 미확보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재신청 하였으나, 선정 불투명 • 미확보 국비 20억에 대한 타사업 변경 추진 → 농업생태체험마을 조성 (국20억)
	•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내에 시설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청소년시설 건립 외에는 국비비원 불가 • 미확보 국비 12억에 대해서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내 체육관 건립 사업(국12억)으로 변경 추진 필요
	• 복지·보건정보 서비스망 구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중, 전국 사회통합정보망시스템 도입으로 중단 • 타사업으로 변경 추진 필요 (시비 2억)
	• 농촌지역 여가문화시설 확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 곤란 • 타사업으로 변경 추진 필요 (시비 3억)
	• 여객터미널 주변 공원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시자체적으로 추진 곤란 •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대체 필요
	• 국민기초수급자녀 중·고교 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28억) 미지원대상 사업으로 일부 시비(5억) 집행

18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③ 사업 추진노력 필요

특별 지원	•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악마을 조성사업으로 256억(국130,지126)집행 완료 • 나머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국비 확보노력 필요
일반 지원	• 팽성강변도로 건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부대 담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 • 사격장 안전문제, 보안문제로 사업부지 확보 애로 • 국방부, 서울국토관리청 등과 협의 노력 필요
	• 팽택학습정보센터 설치 및 정보망 구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제한사업으로 구군청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사 자금난으로 지연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사항 이행 후 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 예정 → 계속 지연될 때에는 민자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19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④ 추가자원 확보 필요

일반 지원	• 주차환경 개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및 민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곤란 • 추가적인 재원확보 필요 • 서정역(환승센터)주차장 토지매입은 LH와 협의지구개발 잉여금으로 추진
	• 지능형 교통관리 체계 구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예산 350억 중 시비 3억 1차 투입 • 단위사업 당 구축비용이 매우 커서 재원확보가 어려움 • 국토해양부 ATMS, 경찰청 UTIS, LH U-city 사업과 연계를 통한 예산확보 추진

⑤ 제도적인 지원 필요

일반 지원	• 산업단지 조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침체 및 토지매입비 증가로 사업성 악화 • 기반시설 지원, 부담금 감면 등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된 부분 만큼 분양가 인하 조치로 사업성 제고 필요 - 근거 : 평택지원특별법 제20조, 제29조2항
----------	--------------	---

20

2.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⑥ 완료 후 잔여 예산에 대한 변경

특별 지원	• 가로정비 및 전선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374억)보다 사업비가 적게(360억) 소요 • 집행잔액 (국비 7억, 한전 7억)에 대한 타사업 변경 필요 • 추가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확대추진 필요
일반 지원	• 국제교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축소 등 잔여사업비 121억 타사업 활용 필요
	• 분뇨처리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직관로사업에 따른 분료량 감소로 증축대신 시설개선으로 사업 변경 완료 • 국비 잔여 151억에 대한 타사업 활용 필요
	• 안중보건소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액 시비로 집행 • 확보하지 못한 국비 10억에 대한 타사업 변경 필요

21



22

IV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3

1. 문제점 - 1. 특별지원사업 반영 미흡으로 사업효과 체감 미흡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특별히 평택시에 지워나는 국비는 17,396억원으로
총사업규모 188,016억원의 9.2%에 불과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국가사업 (55.7%)	특별지원사업(39.5%)				일반지원 사업(4.8%)	비고
			소계	행안부	국방부	기타부처		
목 표	44,000	24,512	17,396	4,128	11,102	2,166	2,092	

※ 국가집행사업 : 교과부 349억(체육관개선, 학교도서관신설, 학교주변 조경사업)
국토부: 24,060억(진위천 수변녹지조성, 평택항 IC, 산업철도, 국도1호 및 38호 우회도로, 평택항개발)
국방부: 이주단지조성 103억

이 중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은 5개사업 4,158억원에 불과
그나마 7년간 국비투자율이 18.3%에 그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

사업명	국비규모	국비투자	투자율	비 고
계	4,158	761	18.3%	
평택호자전거순환 도로	486	453	93%	
평택호횡단도로	1,556	155	9.9%	
평택호관광지	778	153	19%	추진불투명
첨단농업시범단지	588	-	-	추진불투명
도시첨단산업단지	750	-	-	사업축소

24

1. 문제점 - 2.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사업 편중, 도시 불균형 초래

- 총 87개 사업 중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해당하는 사업
→ 총 67개 사업으로 총사업규모의 98.1%(사업비 184,3559억원)로 절대 다수를 차지
- 평택시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 2005년도에 비해 물리적, 경제적 지표는 상승한 반면, 사회·문화적 지표는 급락

도시 (20개 도시 중)	물리적 경쟁력		경제적 경쟁력		사회·문화적 경쟁력		비고
	2005년	2009년	2005년	2009년	2005년	2009년	
평택시	13위	4위	5위	3위	7위	18위	종합 6위

※ 평택시의 도시경쟁력평가('11.9.1 김병규 대구대학교수)
- 인구 30만 ~ 100만 미만의 중간규모의 20개 도시의 평가 결과

25

■ 미군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 우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국제교류센터 건립이 유일
- 이 또한 센터건립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문화적인 충돌 방지 및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

13개분야 1,069개 사업 - 11,103억원

사업수 과다		전체 1,069개사업	
사업 분야	사업량	사업 분야	사업량
소공원(근린광장)조성	121 개소	마을하수도(처리장) 설치	17 개소
마을회관 개축	69 개소	농어촌 도로	28 개소
보안등 설치	469 개소	도시계획시설 정비	65 개소
체육시설 설치	7 개소	기지주변 용수공급	1식 (50개 마을)
주민숙원사업	1식 (158개 마을)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	1식
마을진입도로	81 개소	방음시설 설치	1식
소하천 정비	2 개소	총 계	1,069개 사업

관리의 어려움	세부사업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 이용률, 관리측면 사업효율성 미흡
---------	--------------------------------------

목적성에 대한 시민의견 상충	당초 목적대로 집행 vs. 효율적 측면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
--------------------	--

- ➡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 계획대로 집행
 - 이용률 저조, 관리곤란 →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변경(집단화 집중화 필요)

1. 문제점 - 5. 지역개발사업 집행을 부진

국비 집행율	2008	75.4%	2009	78.2%	2010	78.7%	2011	27.9%
--------	------	-------	------	-------	------	-------	------	-------

2011.5월 현재(당해년도 기준)

이해당사자간 갈등·민원에 따른 사업지연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국비교부 지연

집행을 저조에 따른 다음년도 사업비감소 반복



사업비를 포괄 보조금으로 지원
→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 필요

28

1. 문제점 - 6. 사업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 증가

- 평택시 개발계획 발표 직후 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현재까지 20.8%이상 상승한 반면
→ 국비 지원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
→ 당초 투자계획 대비 65.9%인 14,903억원에 그침 - 그간 지가 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 크게 증가
-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점을 감안하여 현 수준의 지가 및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비투자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산정하면,
→ 대략 2,900억원의 사업비(기회비용) 손실 ;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2018년까지 4,300억 이상의 손실 예상 → 조속한 국비투자대책이 요구됨

당초 단계별
투자계획

구 분	사 업 비				비고
	합 계	2006~2009	2010~2014	2015이후	
합 계	188,016	82,650	80,911	24,455	단위: 억원
국 비	44,000	16,038	16,439	11,523	
지 방 비	7,104	4,217	2,702	185	
공공부문	101,017	54,703	38,814	7,500	
민 자	35,895	7,692	22,956	5,247	

2011년까지 국비 22,614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14,903억원이 투자되고 7,711억원 미투자

평택시
지가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구 분	누적(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비고
평택시 지가 상승률(a)	20.8%	11.9%	5.6%	4.9%	2.7%	1.3%	1.4%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b)	21.8%	4.0%	3.1%	3.2%	5.3%	2.1%	3.8%	

출처 : 국토해양부 자료

29

-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시비 1,502억원(연평균 250억원에 육박)
→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연 500억원 전후임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의 50%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으로 국제교류센터, 보건복지센터, 한국소리터 등을 건립
→ 운영비로 인한 재정난이 예상되는 등 지방비 부담 가중
- ⇒ 재정난으로 운영비가 원활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쓸모 없는 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운영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평택지원특별법』 제14조 제3항
: “지역개발계획은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며, 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영 되어야 한다.” 로 강제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연차별개발계획 협의과정에서 지역개발계획으로 확정된 국비 및 국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사례 발생 (송탄보건소 건립 : 지역개발계획 50:50 ⇒ 연차별계획 16:55)
- 지역개발계획임에도 해당 부처 내 국고보조사업 내용 또는 사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별개발계획 미반영 (청소년여가시설 확충, 국민기초수급자녀 중,고 학비지원, 첨단농업단지 등)
- 연차별개발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광역특별회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배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축산물명품화사업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 지역적으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사업
-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ex. 모산골평화공원)

사회·문화지표를 높일 수 있는 사업

- 교육, 의료, 문화 사업 반영
- 외국인 및 고급인력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우선반영 필요

지가, 물가 상승분에 대한 보전

- 추가적 사업비 지원 필요

지역개발계획 집행을 제고

-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시비 투입 필요)
-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차수분 계약 시행

기지주변사업의 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 당초 계획대로 집행
 - 이용을 저조, 관리 곤란 → 사업효과 우선, 집중화
 -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우선 조정 후 향후 시비지원
- ※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안정리, 신장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우선투자 필요 (주차장, 광장, 문화공간 등)

V 해외 미군주둔지 지원사례

1. 일본 오키나와
2. 미국
3. 독일

오키나와 진흥개발계획을 통한 정책적 지원 (30년간 국비 6조 7,158억엔)

국제해양 박람회
의 성공적 개최

건설산업
지원

‘국제거리’ 조성
으로 관광명소화

관광산업 부흥으로 지역 활성화 달성



34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66.7)”

목적	시책	사업내용
소음장해 방지사업	방음공사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병원·진료소 등의 의료시설, 탁아소, 노인 데이서비스센터·특별양호 노인홈 등의 사회복지시설 ·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방서로 그 상세한 내용이 정해져있음
	이전보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의 이전 등의 보상, 토지의 매입 · 이전처지의 주택 등의 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와 관련되는 도로, 수도, 배수시설,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녹지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 초원 조성 등
소음 이외의 장해 예방사업	장해를 막는 공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개수, 용배수로, 옴, 연못, 펌프장, 도로, 하수도, 텔레비전 방송의 공동수 신시설 등
생활·사업상의 장해 최소화사업	민생 안정시설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등 공용시설,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 쓰레기·분뇨처리시설, 소방시설, 공원, 도로, 녹지, 공민관, 도서관, 노인복지 센터, 양호양로원 등
주변지역에의 영향 최소화사업	특정 방위시설 주변 정비 조정 교부금의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레크리에이션·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용시설 정비

35

3차계획기간 중 “오키나와 경제진흥 21세기플랜” 수립

구분	내용
가공교역형산업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조치 · 입지촉진을 위한 시설정비, 운영주체, 기업유치 촉진, 무역진흥, 기업활동지원 인프라정비 ·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고의 자유무역지역 등 특정지역진흥자금 등의 활용
관광·리조트산업의 새로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임 인하, 자동차도로 통행요금 할인, 사증 수속완화, 상륙허가관련 행동범위 확대 · 관광정보체계정비, 국제회의 유치, 기념공원지구 정비, 역사관 형성, 쇼핑몰 등 관광촉진사업 · 친환경적 Eco, Green, Blue tourism 추진 · 공공인프라 등 관광기반시설 정비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용 인하 · 「오키나와 국제정보특구」구상의 추진 · 정보통신산업 유치, 콘텐츠개발, 디지털영상관련 시설 정비, 네트워크 구축 등 · 인재개발 · 연구개발용 공동이용시설 정비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있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공급 ·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 농림수산업과 관광·리조트산업의 연계

36

공여지 지주에 대한 보상

오키나와현 미군군용지 : 국유지 34.1%, 현/시정촌/민간소유 65%

→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현/시정촌/민간)에게 매년 토지임대료 지불

1998년 기준, 오키나와 미군공여지 지주들은 약 29,564명

→ 중앙정부는 이들에게 연간 767억엔 지불

일본의 군용지 확보는 ‘주둔군용지특별차용법’에 의해 임차계약 형식으로 토지사용권 확보

→ 장래 기지반환시 원소유자의 소유권 인정

37

1. 일본 오키나와

지방재정 지원

구분	내용
기지 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국유제공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1957) · 미군에 제공된 고정자산, 자위대가 사용하는 비행장, 연습장, 탄약고 등은 국유재산으로 분류 · 시정촌은 이들 국유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세 부과 불가하여 세수확보 곤란 · 일본정부는 재원보전 차원에서 이들 고정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정촌에 대해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기지 교부금 제공 · 배분방식은 기지교부금 예산총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상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대상 자산의 종류(비행장, 훈련장), 용도(조음속비행장, 사격장 등), 방위시설 면적 및 소음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조정 교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정교부금 교부요령(1970) · 지방세법 임시특례법(1952)에 의거 시정촌은 미군소유 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주민세, 전기가스세 등 시정촌세도 부과 불가 · 그러나 시정촌은 기지밖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과 군속, 가족에게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도로, 수도, 쓰레기 처리, 분뇨처리,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 그럼에도 비교세조치에 의해 감세액 및 재정수요의 증대에 대한 보전조치가 없어 시정촌에 재정부담 가중 · 따라서 일본정부는 시정촌이 직면한 세수 및 재정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교부금을 제공 · 배분방식은 교부예산총액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을 미군자산액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나머지 2/3은 시정촌민세의 비교세 조치에 의해 시정촌이 감수하고 있는 재정상 부담을 고려하여 배분 · 구체적으로는 미군 및 군속수, 방위시설 면적비율 등을 고려

38

2. 미국

비행장 주변대책

**비행장 부근 포함 기지주변 군사활동에 의한 소음
→ 보상 및 저감대책 마련**

국방성 기금 조성 → 주 및 지방정부 교부
JLUS(Joint Land Use Study : 민군토지공동사용계획)
종합적 기지대책 마련

→ 지방정부의 종합계획 변경, 지구지정, 고도제한 등과 같은 개발통제의 수준 개정, 민군간 토지교환, 개발권 이양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계획보조금 제공

39

군사기지 소재지의 기업 창업과 확장, 전업
→ 연방정부 보증으로 15년간 상환조건 400만마르크까지 융자지원

기초지자체
→ 교통망 연계, 에너지 및 상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 공공관광시설 확충시 지원

접경지 내 지자체 인력양성 추진 시
→ 교육기관 및 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홍보 지원

접경지 내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 접경지역 농업 투자시 금융이나 보조금 지원
→ 관계수로나 도로건설 또는 홍수 방지용 제방 확장시 지원

개인주택 건설
→ 타 지역보다 1/3정도 더 지원
→ 체육관, 수영장, 휴양소, 양로원, 병원, 장애시설 등 복지시설 건설 지원

VI Vision 및 목표

1. SWOT분석
2. 핵심가치 도출
3. VISION
4. 평택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1. SWOT 분석



42

2. 핵심가치 도출

핵심가치 - 3B

자생적 성장기반 모색 (Boom-up)

-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국가차원 각종 지원을 지역성장의 밑거름 활용
→ 자생적(Independent), 지속적(Sustainable) 지역발전 추구
- 국제적 환경조성과 도시이미지의 글로벌화 →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
→ 통한 창조적 국제도시로서 발돋움
-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유치 계기
→ 신성장동력산업의 메카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집약 환경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 (Balance)

- 평택시 남북부와 더불어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 지역간 갈등해소,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서부대생활권의 주거, 산업, 상업, 환경, 교통, 문화 등 추가 지원

아름다운 관광도시 (Beauty)

- 평택시 남북부와 더불어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 지역간 갈등해소,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서부대생활권의 주거, 산업, 상업, 환경, 교통, 문화 등 추가 지원

43

3. VISION

VISION – 성장(boom-up)과 균형(Balance), 그리고 아름다움(Beauty)을 추구하는
조화로운(Harmony) 평택시

국내 최대유일의 국제도시

- 고품격 글로벌 국제도시 창조
→ 저급하고 향락적 문화 지양, 미군 소비도시 지양
→ 외국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 맞춤형 도시개발

산-학-연이 연계된
연구산업도시

- 연구학원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연구개발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및 연계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보유한 도시

- 주민들의 기호에 맞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
→ 타깃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정주환경 및 커뮤니티 정비

TOD개념의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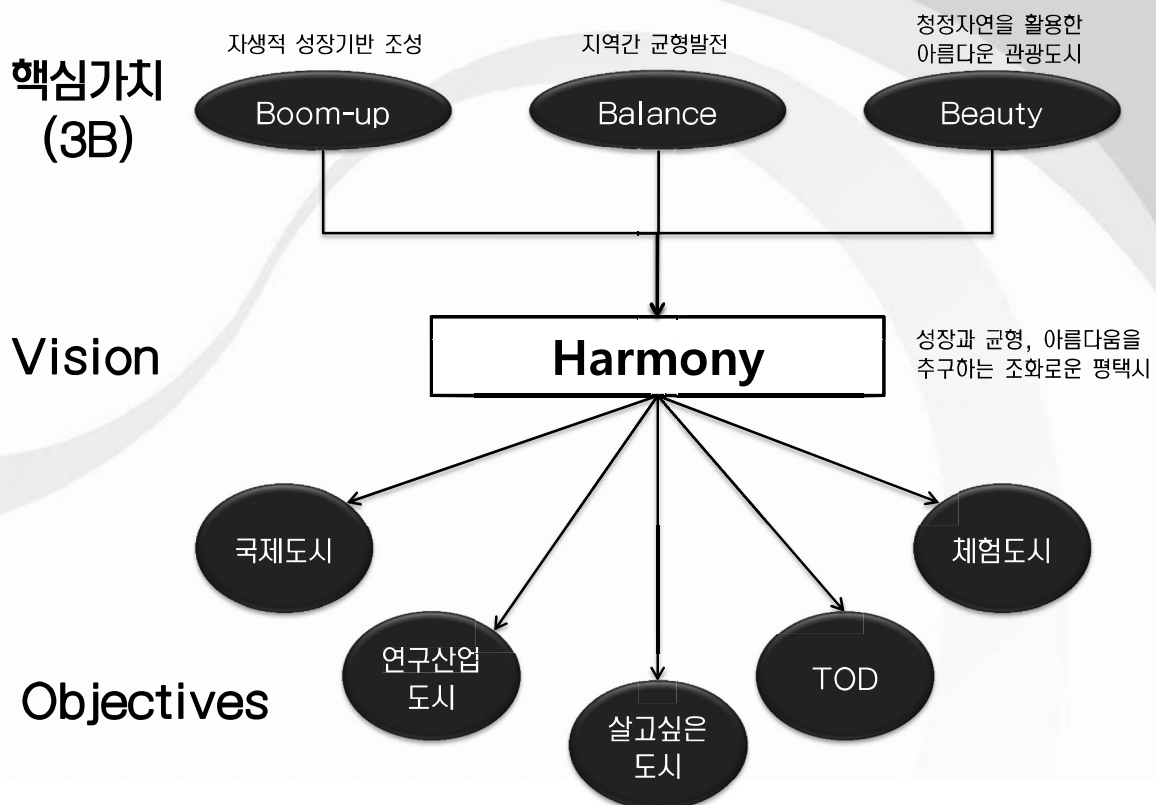
- 도시의 균형적 발전 및 지역간 연계흐름 강화 위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 KTX, GTX 등 기간망 연계와 연결도로망 및 대중교통망 확충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 인조적, 자연적 산물의 생활환경 속 체험이 가능한 도시
→ 지역 주민의 호기심 충족과 창조적 재생산 기반 마련
→ 문화·관광 측면의 즐길거리 확충(외부인구 유입, QOL증진)
→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 창출, 도시 정체성 확립

44

4. 평택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45

VII 발전구상

1. 지역별 개발방향 설정
2. 전략적 개발방안

46

1. 지역별 개발방향 설정



평택시의 신(新) 중심지역으로 개발

<p>고덕신도시 개발 → 주거, 상업, 유통시설 집적 전망 → 지제역 KTX역사 설치에 따른 외부인구 유입 활발 전망</p>
<p>고덕신도시 삼성, LG 전자 입주 → 연관산업 집적 유발 → 신성장동력 R&D수요 흡수 : 산학연 R&D 단지 개발</p>
<p>신장뉴타운, 서탄면, 진위면 등 도시계획시설 정비 → 동 지역으로서의 일체감 조성</p>

국제화지구 조성

외국인이 선호하는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 선호 주거환경, 국제학교 설립, 의료시설 확충, 상업시설 조성 등

환경친화적 개발 지향

친환경 신도시 개발
Techno-park개념의 산업단지 개발
무공해 저탄소도시 지향

녹지축(Green)과 수변축(Blue) 연계 도시개발

무봉산-부락산-억암산-백운산 등 녹지축
진위천, 안성천 등 수변축 연계
→ 녹도, 자전거도로 등 주민건강과 편의 증진

47

1. 지역별 개발방향 설정



구도심 슬럼화방지를 위한 재정비

- 평택시 중심지의 북부 대생할권 이동에 대비한 도심 재활성화
 - 도심의 활력유지에 초점
 - 뉴타운 해제지역인 평성지구의 형평성 있는 개발 추진
 -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확보방안 모색

GTX연계 TOD개발

- 지제역-평택역 GTX연계 추진
 - 광역급행간선망의 지역 내 연계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평택역을 시발점으로 TOD중심의 대중교통연계망 추진

48

1. 지역별 개발방향 설정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

- 국도 38호선 확폭 등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동-서간 교통연계
 - 평택시 남북부와 서부지역을 연계하는 주간선망은 국도 38호선에 의존
- GTX연계 확장 및 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를 활용한 철도망 연계
- 동-서, 남-북간 교차지점으로서의 안중역 기능활성화
 - 물류, 유통, 상업 기능활성화 및 연계도로 확충
- 안중역과 평택호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정비 및 남동측 여객역사 신설 등

상업·유통상권 및 산업단지의 확충

- 포승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안중, 청북 상업·유통상권 개발
- 도심상권과 차별화되는 수요 창출(아울렛몰, DIY 등)
- 경쟁력 있는 업종의 산업단지 기반 확충

하천변 침수재난 대비

- 안성천, 진위천 및 오산천의 수위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
 - 침수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대비책 마련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주거단지 개발

- 기존 도심과는 다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의 명품주거단지 공급

49

2. 전략적 개발방안

1)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외국 고급인력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평택지원특별법 법안 개정

-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 30%범위 내 외국 교육기관장 결정 (현행 개교시 30%, 5년후 5%)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을 통한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 공영형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교지 및 교사 무상공급
- 외국인 주거단지 현상공모에 의한 택지분양 허용

평택국제학교 설립

- 주한미군, 동반가족, 외국인 유입 등을 고려시 초중고 15개 학교 필요
→ 고덕국제화도시와 주변지역들에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설립 계획
→ 내국인 학생비율 조정, 교지 및 교사 무상공급 등 법령 개정

평택영어교육센터 설치·운영

- ‘평택학습정보센터 설치 및 정보망 구축’ 대체사업으로 ‘평택영어교육센터 설치’
→ 국제적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언어능력 향상 지원
→ 학식이 있는 미군과 동반가족들을 강사로 선정하는 방안 모색(미군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차원)
→ 시 차원에서 사교육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설

50

2. 전략적 개발방안

1)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

다문화도서관 건립

- 다문화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하기 위한 교육·문화공간 조성 필요
 -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종 구분 없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공간 조성
 - 언어별, 문화별 전문화된 특화공간 조성
 -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평생학습기회 제공
 - 국·도비를 활용한 중앙도서관 확보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지원

- 인적, 정보, 문화, 스포츠, 예능교류 등을 통한 국제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운영비 국비지원 필요(∼2020)

송탄



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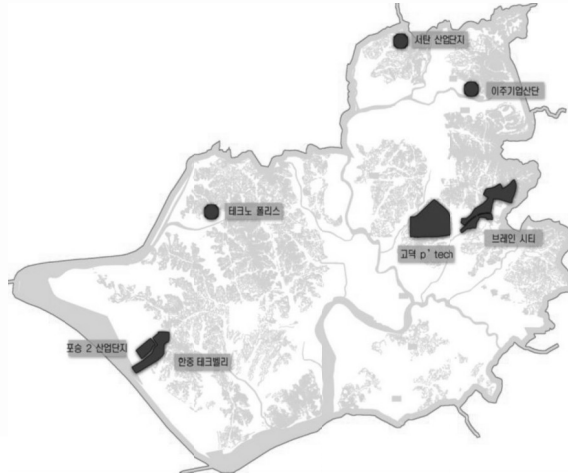
51

2. 전략적 개발방안

2)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촉진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사업의 촉진 및 대체산업단지·사업자 선정

- 평택시 내 7개 주요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추진 부진 -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간경과에 따른 토지보상액 증가
→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용수공급 등 지원과 더불어 각종 부담금 면제 및 감면 추진, 의무규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사업진행의사 타진 후 추가적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물량회수 후 신규 산업단지물량배정 추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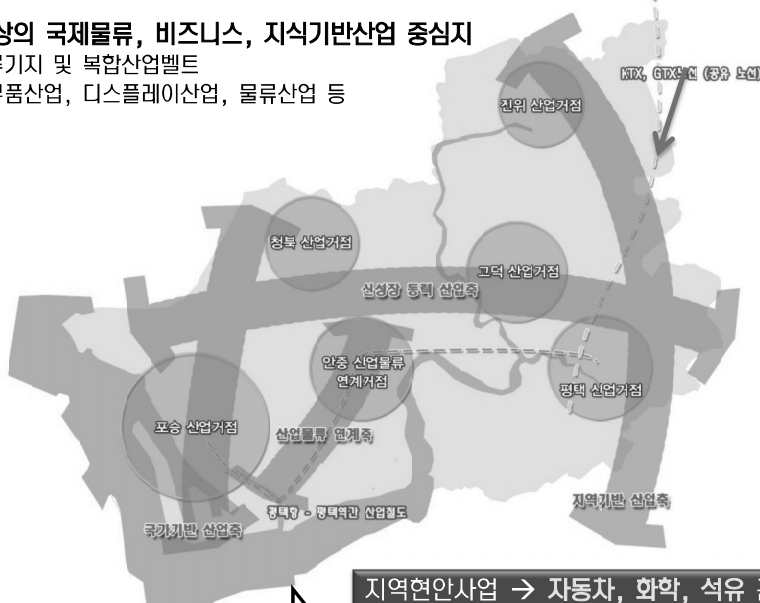
2. 전략적 개발방안

2)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촉진

산업축의 공간적 재구성

동북아 대상의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종합물류기지 및 복합산업벨트
- 자동차부품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물류산업 등



삼성의 투자계획 신사업

- 바이오시밀러
- 태양전지
- 2차전지
- LED 또는 AMOLED

지역현안사업 → 자동차, 화학, 석유 관련
신성장사업 →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AMO)LED, 바이오 등
신성장 관련 R&D 기능

53

2. 전략적 개발방안

2)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촉진

화물주차장 건립

- 화물차량 주차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화물주차장 건립
 -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 사업기간 : 2013-2015
 - 규모 : 부지 3,000m², 주차장 105면
 - 총사업비 : 40억원

54

2. 전략적 개발방안

3) 살고 싶은 도시 조성

기지주변 구도심지역의 재정비 촉진

- 도시계획시설 정비(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 미진사업 또는 추진불가능 사업 재원 활용



- 팽성, 신장 일원의 상황에 맞게
형평성 있게 추진
 - : 팽성 : 뉴타운 해제 상태
 - 신장 : 뉴타운 지정 상태



55

2. 전략적 개발방안

3) 살고 싶은 도시 조성

명품주거단지 조성

- 고덕신도시 내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모델개발 및 이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도심과 차별화된 저층 전원형 고급주거단지 개발을 통해 수요층 차별화

프랑스 생-강텐-앙-이블린: Saint-Quentin-en-Yvelines



56

2. 전략적 개발방안

4) TOD중심의 연계교통망 추진

GTX노선연장을 통한 TOD체계 구축 및 역세권 개발

서부생활권 활성화 고려

- 산업철도 및 서해안복선전철 교차점인 안중역 주변에 산업·물류 연계거점 조성
- 첨단산업단지 및 유통상권 조성 추진



- KTX와 노선 공유 후 평택역에서 분기
- 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 활용
- 평택역-안중역-포승 연계 완행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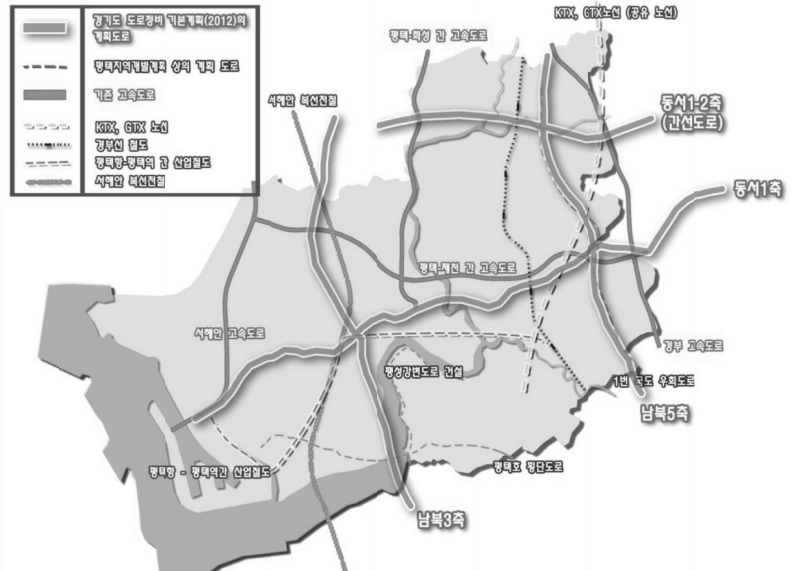
57

2. 전략적 개발방안

4) TOD중심의 연계교통망 추진

동-서, 남-북간 간선도로망 확충

- 2016년 이후 주변 도시로부터 많은 인구 유입 예상
→ 동-서, 남-북 간 간선도로망이 미약하여 평택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2012)상 계획 반영 및 국가자원의 지원 필요
→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평택지원개발계획상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민자 활용 고려
- 확충 노선 및 교통용량을 활용한 BRT(Bus Rapid Transit) 개설 및 역을 중심으로 하는 TOD체계 구축



58

2. 전략적 개발방안

5) 균형적 상권의 형성 및 상업적 수요 창출

서부대생활권 유통상권 조성을 통한 평택시의 균형적 상권 형성

Do It Yourself 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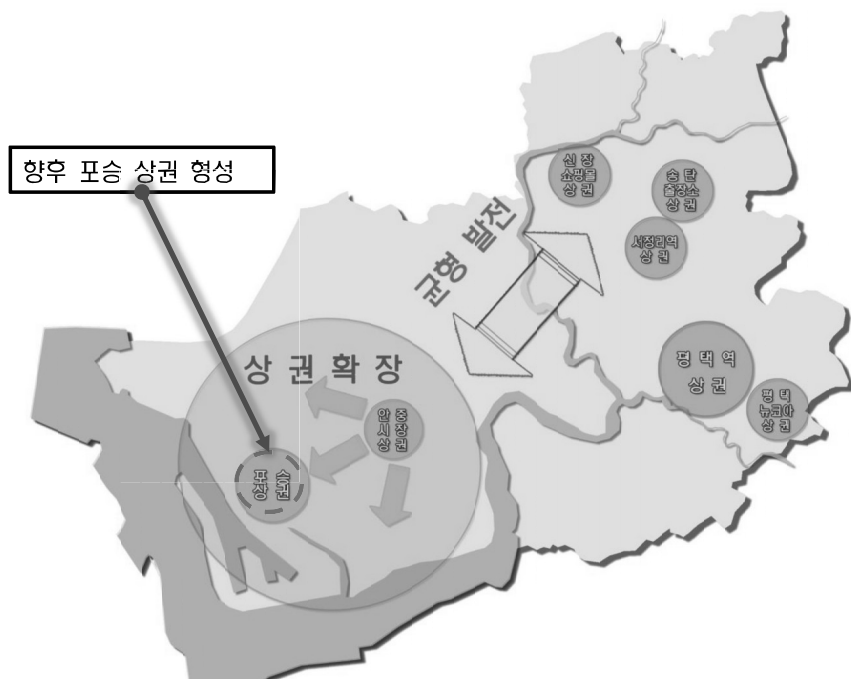


Ex. 미국 Home Depot

창고형 아울렛



Ex. 코스트코



2. 전략적 개발방안

5) 균형적 상권의 형성 및 상업적 수요 창출

교외형 아울렛몰 매장 추진

- 인구 및 시설의 집약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심과 차별화되는 상업 컨셉 도입 필요

→ 교외형 아울렛몰 추진



60

2. 전략적 개발방안

6) 농업지원

로컬푸드종합유통센터 건립

생산자 농식품가공, 판매공간 제공

소비자 농업, 건강을 주제로 한 체험

휴식공간 제공

먹거리 구매공간 제공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압력 가속화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현대화된 첨단농업시설 확충
- 평택복합화력발전소 폐열 활용



침수 등 수재 대비방안

하천변의 지대가 낮은 지역을 계획적으로 홍수시 물을 담아놓을 수 있는 유수지기능을 하게 만들어 생태공원 및 체육시설로 조성하고, 유사시 홍수피해가 발생 방지



61

7) 보건복지사업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건설 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 필요
→ 국비, 도비, 시비 지원(총 22.8억원)

평성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남부문화복지회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법인 성행과 사업성 저하로 남부복지문화센터로 대체

→ 일반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추진시 보조금 지원의 한계로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검토

평택남부노인복지회관 - 남부문화복지회관 건립 대상지



7) 보건복지사업

관광지와 거점병원 연계 의료관광체계 구축



고덕신도시내 거점 병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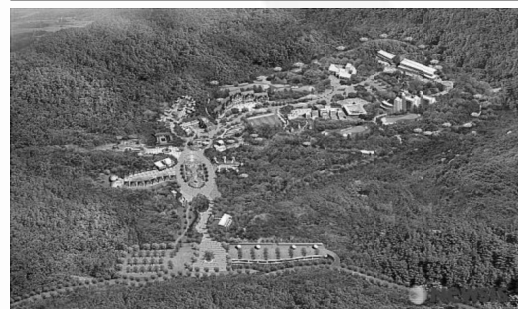
의료관광체계 구축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Eco-Therapy Town 조성

치료와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단지 조성

- 미국 Canyon Ranch Resort
- 영국 Champneys Forest Mere
- 일본 국제건강플라자
- 한국 제천 에코테라피 건강특구



2. 전략적 개발방안

8)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

-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상징적인 시 중심의 공원조성
- 국제평화의 상징도시로서의 역사성 부여
- 휴식과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향토사박물관 건립

- 지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간
- 도시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는 향토사 기록 보존
- 사료기증 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조성



사례 : 강릉 향토민속관

64

2. 전략적 개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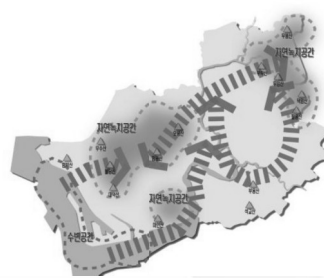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도심속 녹지·여가 공간축 조성

Blue-Green Network 조성



보행, 자전거를 통해 어디나 갈 수 있는 도시



도시숲 조성사업

도시 내에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권 주변에 수목식재로 둘러싸인 녹색도시의 조성

- 1억그루나무심기, 가로수식재 및 등산로 관리
- 공사비 15억원



영국 Regent Park

65

2. 전략적 개발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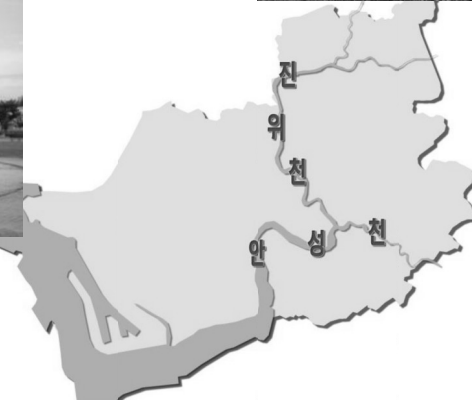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안성천, 진위천 수변체육공원 조성



둘레길 · 올레길 조성

자전거 도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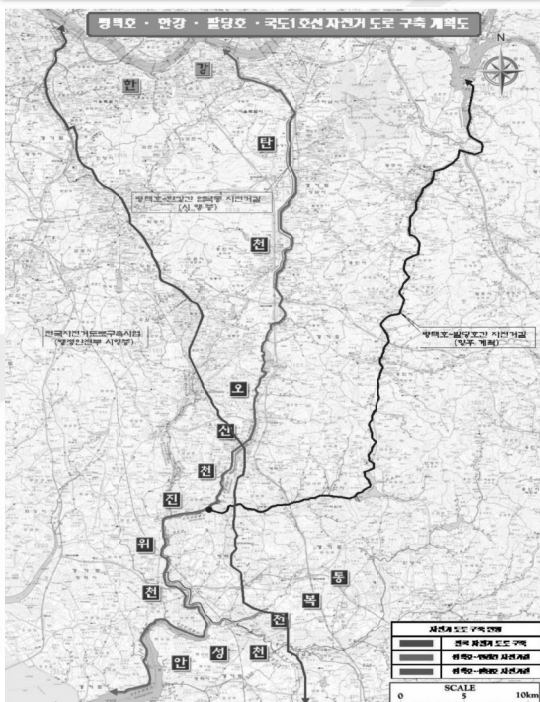


66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평택호-한강, 평택호-팔당 자전거도로



해안 디자인특화도로 조성(평택항-평택호)



가족단위 오토캠핑장 조성



67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조종면허시험장 유치

경기도 내 가평군에 1개소 위치
→ 수도권 남부수요 충족 필요

평택호 내
경기 요트학교 활용

경기 조종면허 시험장

경기 요트학교

요트 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 유치
→ 수상 레포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예술의 전당 건립

■ 2016년 이후 건립(LH공사 2단계사업 포함)
→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불가능
시, 국비 625억원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해야
하므로 시비부담 확대 예상

- 규모 : 부지 30,563m², 연면적 12,000m²
- 총사업비 : 89,300백만원



68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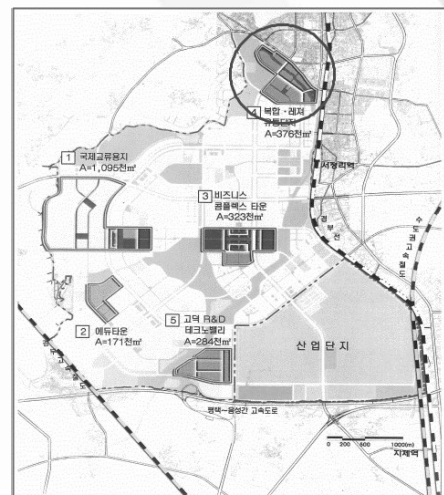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대규모 행사 및 운동경기 개최에 따른 시민들
의 삶의 질 향상



레저스포츠파크 조성

레저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레저타운
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
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69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종합체육관 건립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어항구 조성을 통한 어촌지원 및 해양 레저단지 조성

-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위판장과 물양장 등을 설치하고 어구 적재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 소래포구와 같이 어촌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 방문객에게는 체험 및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 → 생태체험이나 관광객들의 숙박휴양지구로서의 역할
- 친수공간 확보로 수산업활동 기능강화 및 평택호관광지 연계개발이 기대되며, 항만친수공간과 연안지역 상호연계로 해양항만관광 활성화 전망



70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통한 수변관광지간 연계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후, 초기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의 시범구간 운영 후 확대

시화호, 가평 남이섬 등 추진 중

- 초기사업비 남이섬 23억, 시화호 17억 비용 추정
- 연간운영비 각 20억/12억
- 현재 남이섬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Amphicoach

- 육상 112km/h
- 수상 20노트이상(37km/h)
- 50명 탑승 가능

71

2. 전략적 개발방안

9)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체류형 관광객 유인을 위한 지역별 컨셉의 숙박단지 개발

■ 평택시는 중·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레저자원의 결합상품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결합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레저용 숙박단지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택시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거점별로 컨셉에 따라 분할하고, 이에 걸맞은 외관과 기능의 주택형태의 숙박지를 1일 단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함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테마펜션리조트



72

2. 전략적 개발방안

10) 한미 공영사업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필요

⇒ 과거 미군기지 주둔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및 주민과의 마찰로 부정적 이미지 형성

가. 군민합동 프로그램 추진

Good Neighbors Program (미군 및 지역주민 합동 봉사활동) 지원

- ⇒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 감소 및 미군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 고취
- ⇒ 한국과 미국의 명절 및 공휴일에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나 프로그램 진행
- ⇒ 외국어 학습 봉사활동 지원

나. 미국 문화 체험 시설 건립

평택의 청소년 및 주민, 관광객에게 미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의 장 마련

- ⇒ 한국전쟁 참여에 대한 역사적 내용 및 희생자에 대한 추모공간 마련
- ⇒ 미국 고유의 건축양식이나 생활양식을 적용하여 시설 및 주변 환경 디자인
- ⇒ 국제교류센터 등 관련 시설의 운영비 지원



[파주시의 브띠 프랑스 사례]

73

2. 전략적 개발방안

10) 한미 공영사업

다. 국제거리 조성

각 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 조성
⇒ 도시이미지 국제화 및 외국인과 내국인간 교류

라. 한·미 친선 페스티벌 운영지원

미군주최 정기적 축제 운영
⇒ 미군부대 개방 및 각종 축제프로그램 운영
(ex. 미8군 용산기지 페스티벌)



마. 알파탄약고부지를 활용한 문화컨텐츠 개발

알파 탄약고(약 8만 평)



평택시로 반환되는 미군 탄약고 부지를 문화·재생 시설로 조성
- 역사의 보존 및 활용이 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에 첫 보존 활용 사례
- 타 지역의 개발 모범사례로 적용 가능

Ex.
북경 798 예술특구
독일 뉴아트미디어센터 ZKM

74

2. 전략적 개발방안

10) 한미 공영사업

바. 미군 주둔지 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 추진

미군과의 쌍방향 문화·예술교류와 커뮤니티를 구축

⇒ 미군 주둔지 문화교류 기반구축사업 추진
⇒ 영어공용화지역 만들기, 국제문화지구 거버넌스 구축, 문화교류 인력발굴 및 양성, Taste Carnival 개최, 문화명소 만들기, 전략적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특화거리 조성, Taste Space 조성 등

구 분	금액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계	18,025	
영어 공용화 지역 만들기	1,600	글로벌 상인양성(800), 문화지구 영어의 날(500), 영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300)
국제문화지구 거버넌스 구축	620	문화교류 시범사업(350), 참여형조사연구사업(150), 공동운영 위원회 조직(120)
문화교류 인력 발굴 및 양성	2,700	한국문화학교(1,050), 안정 MANIAN(900), 안정GLOLIAN(450), Salon ZZAM(300)
Taste Carnival개최	4,950	Season Carnival(1,800), Weekly Carnival(1,950), 안정 MUPY(4,950)
문화명소 만들기	3,000	창조공간육성(1,000), 우수점포육성(1,750), 문화 명소 관리시스템 구축(250)
전략적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1,690	Taste Card(380),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110), 마케팅 전담 조직 운영(1,200)
특화거리 조성	780	Taste Street(200), Media Gate(450), Silent Document(450), Pubic Cycle(50)
Taste Space조성	2,685	Taste Museum Park(1,750), Taste Full info center(245), Parking Gally(690)

75

감 사 합 니 다

부 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자원 특별법 및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삭제 [2009.12.29]

제5조

삭제 [2009.12.29]

제6조

삭제 [2009.12.29]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8조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

제9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시행자)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행할 수 있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9]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어업인 또는 그 단체이거나 상공인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관련판례

-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구의 구역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사업승인권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⑧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가 종합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 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1.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제5호의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5.23]]
- ⑧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10.3.31, 2012.2.22] [[시행일 2012.5.23]]

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①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1.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환공여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피징발자, 피수용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생계대책 대상자,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군기

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때는 「국유재산법」 제52조에 따라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31]
- ④ 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7.1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공장 총 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 ①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고시, 개발·관리, 해제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따른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특례)

-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이하 "지원도시개발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2010.3.3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민간개발사업자로서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 ①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007.4.6 제

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9.12.29,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2.4.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계획,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 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신구조문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7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 ①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시행일 2012.5.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인·허가등의 의제) 신규조문관련판례

-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8,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12.29,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시행일 2014.7.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

지의 전용신고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2.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

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이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이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④ 제3항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2.4.15]]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12.29]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양도)

- ① 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출자의 상한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 ①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0.26]]
-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관광·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시행일 2011.1.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과태료

- 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과태료)

-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6.3.3 제7854호]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승인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 ⑮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 <1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48조”를 “제50조”로, “제49조”를 “제51조”로, “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19>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를 “제68조”로 한다.

<29>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 생략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16> 생략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 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2>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⑦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4> 까지 생략

<18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차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노동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6>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6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3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

획"으로 한다.

<6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범위) 신규조문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읍·면·동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 또는 이에 연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6.15,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삭제 [2010.6.15]

제5조

삭제 [2010.6.15]

제6조

삭제 [2010.6.15]

제7조

삭제 [2010.6.15]

제8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의 개요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5]

1.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면적 변경
2. 확정된 종합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예산변경

제10조 (사업의 대상과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0.6.15,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및 택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9.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증설
1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13.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4.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5. 사업의 시행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소요 토지 확보방안
8. 사업의 효과
9. 관계도면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2.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는 증감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승인 고시)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제14조 (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15]
1.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여구역의 면적비율과 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의 비율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17]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17, 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나. 부가통신업
- 다. 연구 및 개발업
- 라.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
- 마.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바. 삭제 [2008.12.17]
- 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

- 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호텔업 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동표 제3호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업
-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에 의한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본조제목개정 2010.6.15]

제17조 (학교의 이전특례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신구조문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6.15,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교육재정의 특별지원)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0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제안) 신구조문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4. 삭제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9.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
 - 가.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나.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다. 지원도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10.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서류
 -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변경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변경
 3.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한 면적 증감
 - ③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
 2.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또는 변경·해제사유
 4.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일자

제21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신구조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③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의 개발계획의 승인) 신구조문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개발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위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의 시행기간
 5.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6. 법 제22조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지정·승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0.6.15]
1. 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 면적 중 100분의 30미만의 면적 변경과 변경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의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현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제23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직업안정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업종전환 및 경영합리화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법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 ① 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상속사실 또는 피징발·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지원)

법 제27조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종합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7조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의 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1.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다.
2. 환경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환경기초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되거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초조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2.5.22]
4. 환경기초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9조 (토지 등 매입업무의 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입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매입할 토지·물건·권리 및 위탁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율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선수금)

- ①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양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 나.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 2. 분양하려는 토지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30에 달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보조율)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을 넘거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32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신구조문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자금의 지원 등) 신구조문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항만·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2. 공원·녹지의 조성사업비
 3.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6. 각종 개발의 공동구의 공사비
 7.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공사비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34조 (담당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5조 (과태료)

- ① 삭제 [2008.12.17]
- ② 삭제 [2008.12.17]
- ③ 삭제 [2008.12.17]
- ④ 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 ⑤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6.9.4 제196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7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1>및 <2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17 제21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7> 까지 생략

<1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15 제2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고시 절차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지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5.22 제23801호]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4>부터 <129>까지 생략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